

기본소득을 주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까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명예이사장,
한신대 명예교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질 것이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 글은 이런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이 글의 목적은 어떤 거시경제 학설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기본소득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정의된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자산의 실질가치가 감소한다. 명목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추어진 조세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모든 가격이 동일하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실질소득이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소득이나 자산 가치가 인플레이션을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의도하지 않은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온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재분배는 부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다. 부자들은 가격이 오르는 자산을 구매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피해는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일지 모른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너도나도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된다. 집이 없는 사람은 자산 격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소득의 큰 부분을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이 가격을 인상시키면 인플레이션 악순환(포지티브 피드백 루프)이 시작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되면(하이퍼 인플레이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혁명이나 전쟁까지도 걱정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학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는 주제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대

응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신고전학파, 통화주의, 새 케인즈학파, 새 고전학파, 새 신고전학파, 포스트 케인즈 학파(민스키 학파, 근본 케인즈 학파, 현대통화이론) 등등 거시경제학 분야에 그렇게 많은 학파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거시경제학에 이렇게 학파가 많은 것은 거시경제 자체가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일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서는 참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거짓일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다 보니 근본적으로 불확실하고, 과거가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드물다. 70년대 인플레이션과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많이 다르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면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글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기본소득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따져보려고 한다.

첫째,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통화주의자들은 통화량의 과도한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통화량을 줄이면 된다. 그런데 민간은행이 통화량을 대부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자율을 올려서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다.

조세를 제원으로 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는 정책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비례세나 누진세를 부과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0~20%의 부자들만 순부담자로 만들고 나머지 80~90%의 사람들을 순수혜자로 만들 수 있다. 순부담자의 화폐가 줄어드는 만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화폐가 늘어난다. 경제 전체의 화폐량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조세에 기반한 기본소득 지급은 인플레이션과 무관하다.

재정 적자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권화폐를 발행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줄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민간은행의 지불준비율(예금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적립해 두어야 한다)을 높여서 민간은행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이자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둘째, 수요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케인즈주의자들은 대체로 경제의 잠재적인 생산 능력(완전고용 상태) 이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완전고용 이하의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은 크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고용과 생산이 늘어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는 과도하게 늘어난 수요를 줄이면 된다. 조세를 증가시키거나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이자율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데 이 비율(소비/소득)을 소비성향이라고 부른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당연히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비(수요)가 늘어난다. 그런데 기본소득 금액 전체만

큼 소비(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소비성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조세형 기본소득은 순부담자의 소득은 줄어 들고 순수혜자의 소득은 늘어나게 만드는 정책이므로, 순부담자의 소비성향과 순수혜자의 소비성향 차이만큼만 소비(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순부담자의 소비성향이 0.6이고, 순수혜자의 소비성향이 0.8이고, 기본소득 금액은 100조원(5천만 명×2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순수혜자의 수혜금액이 50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50조 \times (0.8 - 0.6) = 10조$ 원만큼 수요가 늘어난다. 기본소득 금액의 10% 수준이다. 골목 시장이 되살아나겠지만 경제 전체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해 보자. 기본소득 금액이 100조 원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소득 금액이 100경 원이라면 분명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중간에 어디인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 금액 이하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그 수준을 모르지만, 기본소득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기도 힘들다. 작은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금액을 올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지 살펴본다.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가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워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조세를 조금 더 증가시키거나 정부지출을 조금 줄인다.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현대통화이론^{MMT} 학파의 주장을 응용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아무런 예산 제약이 없다. 정부가 무이자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이것을 인수하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 때 조세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수단이다. 기본소득 지급과 조세 증가라는 두 개의 독립된 정책을 함께 실시하면 기본소득도 지급하고 인플레이션도 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두 개 이상의 정책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공급 애로로 인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석유 가격의 인상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의 인상 등과 같이 공급에 애로가 생기면 일어날 수 있다. 공급 애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경기가 후퇴한다(스태그플레이션). 이 경우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공급애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석유를 대체할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전쟁을 멈추면 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공급애로를 해결하기 힘들다면,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한다. 이자율을 인상하면 수요가 위축되므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기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 때 이자율 인상과 함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자율 인상으로 인한 경기 후퇴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이자율을 조금 더 올려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의 이자율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을 멈출 수 있다고 할 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자율을 5% 수준까지 올려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본소득 없는 4%의 이자율 상태보다는

기본소득이 있는 5% 이자율 상태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훨씬 견디기 수월할 수 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은 공급 애로에서 시작되었지만 물가인상 →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 기업의 가격인상 →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을 내장된 built-in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부른다. 노동조합과 대기업 사이의 갈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때 사용되었던 정책이 소득정책이었다. 그것은 임금의 인상을 생산성 향상 이내로 억제하고 가격 인상도 억제하는 정책이었다. 소득정책은 이론적으로는 불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소득정책을 함께 실시하면 임금 인상요구를 억제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삭감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기본소득이 보충해 주기 때문이다.

넷째, 투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재인 정부 내내 우리나라는 극심한 부동산 투기에 시달렸다.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GDP가 1,658조 원에서 1,933조 원으로 275조 원 오를 때 토지 가치는 5,014조 원에서 7,364조 원으로 2,350조 원 올랐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 아파트의 2016년 상반기 평균 거래가격은 40억 원이었는데, 2021년 상반기의 평균거래가격은 80억 원이었다. 부동산 가격의 비중이 물가지수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그때부터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주거비로 지불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셈이다.

투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를 막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를 막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투자를 막는 데 실패하였다.

결국 최근의 이자율 인상으로 겨우 부동산 투기가 가라앉게 되었다. 이자율 인상은 부동산 투기 수요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자율을 인상시켜 부동산 투자를 막는 것은 경제 전체를 희생시켜서 부동산 투자를 막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수요만 줄일 방법이 있을까? 있다. 토지 보유세/토지 배당 정책을 실시하면 된다. 토지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토지배당은 토지 보유세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줄이면서 경제 전체의 수요를 증가시켜 경기 후퇴를 막아준다. 이와 같이 투기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투기에 대해 과세하고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나누면 경기 후퇴 없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로 도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디스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을 줄이거나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